

2019년 서울시 9급 사회 문제와 해설(A책형) (2019.06.15.)

사회·문화 1, 2, 9, 10, 16,
20번(6문제)
경제 3, 6, 8, 11, 15, 17번(6문제)
법과 정치 4, 5, 7, 12~14, 18,
19번(8문제)

1. <보기>의 (가)~(라)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가)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 (나)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 (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 (라)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 ① (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 ② (나)와 (다)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 ③ (나)는 (라)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 ④ (나)와 (라)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각 사례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기'란 자기의 체험을 손수 적은 글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써놓은 글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문헌 연구법에 해당합니다.
- (나)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은 면접법에 해당합니다.
- (다)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므로 참여 관찰법에 해당합니다.
- (라)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질문지법에 해당합니다.

- ① (O) 문헌 연구법(가)이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면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 되고, 문헌이 가진 내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활용되면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② (X)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가 질문지를 읽고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문맹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화'를 정보 수집 수단으로 하는 면접법(나)과 '참여와 관찰'을 정보 수집 수단으로 하는 참여 관찰법(다)은 조사 대상자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O) 질문지법(라)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연구 대상의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면접법(나)은 연구자가 대

면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주동적으로 상황을 조율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접법(나)은 질문지법(라)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 ④ (O) 면접법(나)은 대화를 통해, 질문지법(라)은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나라의 사회 과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회학자 갑(甲)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다. ㉡ 갑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1970년대 한국에도 유입되어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①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 ②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 ③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 ④ ㉠은 ㉡과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갑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종속 이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 근대화론, ㉡은 종속 이론을 의미합니다.

- ①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② (O) 종속 이론(㉡)은 주변부 국가의 저발전 원인은 중심부 국가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국가 내부가 아니라 국가 외부에 있다고 봅니다.
- ③ (O) 근대화론(㉠)은 이미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 선진 사회를 모형으로 삼는다면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반면 종속 이론(㉡)은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발전을 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근대화론(㉠)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합니다.
- ④ (X) 근대화론(㉠)은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발전 경로의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 <보기>는 질문 (가), (나)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 기>

	A	B
(가)	예	아니오
(나)	아니오	예

- ①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②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③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④ (나)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제를 강조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체제의 유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경제 체제와는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즉,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모두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 ② (X)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합니다.
- ③ (O)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X)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나)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B가 A보다 경제적 유인체제를 강조한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4. <보기>의 (가)와 (나)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 ① (가)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③ (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나)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 정치의 유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인 ‘대의제(간접 민주 정치)’입니다. (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 정치를 일부 도입한 형태입니다.

① (X)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이 직접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가) 역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형태입니다.

② (O)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민주 정치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나)는 대의제(가)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O) 영토의 확대, 인구의 증가 등에 의해 국가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효율적으로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대의제(가)입니다.

④ (O) 대의제(가)에서는 시민이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갑(甲)과 을(乙)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丙)이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A를 키우던 중 갑과 을은 불화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다. 1년 뒤, 갑은 교통사고로 3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 하였다.

- ①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②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③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④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가족 관계와 법(이혼, 상속, 친양자 입양)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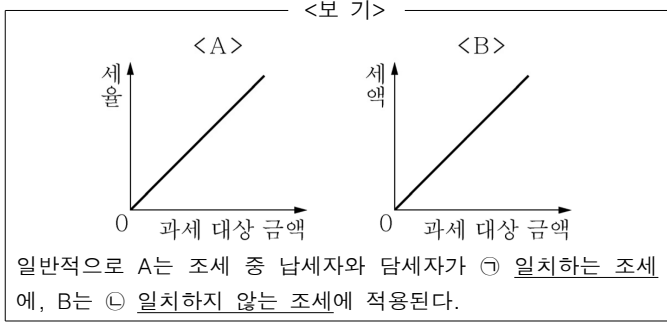
① (X)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 1개월)은 ‘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② (X) 갑에게는 상속인으로 직계 비속인 A만이 존재하므로 A가 갑의 적극 재산인 3억원에서 소극 재산(빚)인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갑과 을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O)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됨으로써 A는 더 이상 병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재산은 나머지 직계비속인 B가 상속하게 됩니다.

④ (X) 가족 관계 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라도 자녀로 기재될 뿐입니다. 즉, 친자녀와 구분하여 별도로 양자라고 기재되지 않습니다.

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B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②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 ③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 ④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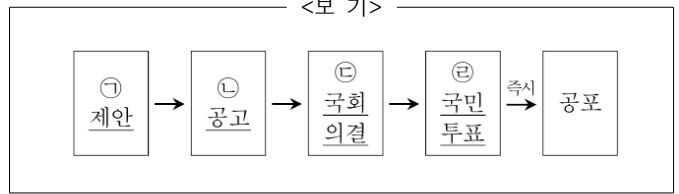
[출제영역] 누진세와 비례세, 직접세와 간접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이고, ㉠은 직접세, ㉡은 간접세입니다.

- ① (O) 비례세(B)의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② (O)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지출이나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의 강도를 완화시켜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진세(A)는 이러한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만약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므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므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③ (O)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크며, 이에 따라 조세 징수 비용도 크게 나타납니다.
- ④ (X)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가 적용되고,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의한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조세, 사회보장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 ③ ㉢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안은 확정 된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 제안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칩니다.
- ② (X)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합니다.
- ③ (X)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④ (O)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됩니다.

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①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국내 총생산은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 ③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 ④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의 한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국내 총생산은 시장 가격을 통해 계산되므로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은 경제 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자원 봉사 활동,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등은 국내 총생산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② (X)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반영하며, 여기에서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 ③ (O)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더한 총량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은 통해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분배 상태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④ (O)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만을 반영할 뿐 여가의 가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가도 국민들의 복지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국내 총생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올림픽은 전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 ②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 ④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은 올림픽이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과 부합합니다.

- ① (O) 기능론은 사회 구조의 여러 부분들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갈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 ② (X) 기능론은 사회 제도나 구조에 맞추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속성을 경시하는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 ③ (X)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갈등론은 계급투쟁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적대적 관계에 주목합니다.
- ④ (X) 사람들의 상황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람들의 상호 작용 결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합니다.

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 기>

○○ 기업 경영 혁신 보고서

○○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등 ㉠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 ①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 ②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 ③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④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모든 업무에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관료제입니다. 반면 탈관료제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은 관료제, ㉡은 탈관료제를 의미합니다.

- ① (O) 관료제(㉠)는 많은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 관리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며, 이에 따라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반면, 탈관료제(㉡)에서는 계층 구조가 단순하게 축소되어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어집니다.
- ② (O) 관료제(㉠)는 규범과 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새로운 구성원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③ (X)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관료제(㉠)는 조직의 활동이 일관성 있는 규칙과 규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탈관료제(㉡)는 규약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업 수행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④ (O)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탈관료제(㉡)는 능력과 성과 중심 보상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매달 A군은 1만 엔을, B군은 100달러를 구입한다. ㉠ 원/엔 환율 변동과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A군과 B군이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A군	9만 원	10만 원
B군	11만 원	10만 원

- ①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 ②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 ③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④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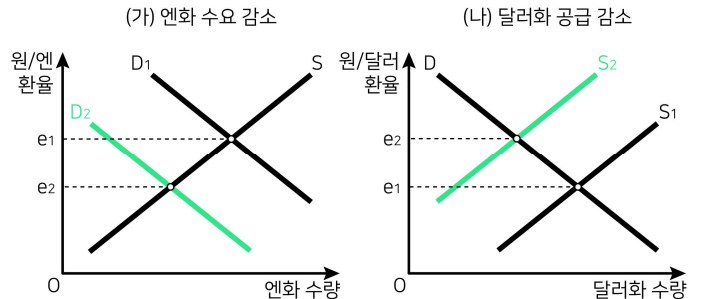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과 효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에서 주어진 엔화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원/엔 환율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보기>에서 주어진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는 적어지고 있으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엔화(외화)의 수요 감소는 원/엔 환율을 하락시킵니다.
- ② (X) 달러화(외화)의 공급 감소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킵니다.



- ③ (O) 원/엔 환율 상승(㉠)은 일본으로의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고, 일본에서의 상품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④ (X)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기>와 같이 B군이 미국 유학 경비로 100달러를 필요로 한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경비 부담이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2. <보기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1>		
구분	A	B
내용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 <보기2>
- ㄱ.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 ㄴ. 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 ㄷ. 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 ㄹ.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 ㄱ. (O) 중·대선거구제(B)에서는 최고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소 정당이라도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 ㄴ. (X) 소선거구제(A)에서는 최고 득표자만이 당선이 되므로, 최고 득표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B)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A)에 비해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 ㄷ. (O) 소선거구제(A)에서는 최고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군소정당 후보보다 거대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양당제 형성에 유리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B)에서는 소선거구제(A)에 비해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하므로 상대적으로 양당제 형성에 불리합니다.
- ㄹ. (X) 중·대선거구제(B)는 소선거구제(A)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구역이 넓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 기>		
구분	t기	t+1기
A당	40%	60%
B당	32%	37%
C당	25%	2%
기타	3%	1%

* 두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임.

- ①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 ②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 ③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 결과 분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t기에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습니다. 반면, t+1기에는 A당이 60%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t기에 비해 t+1기에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X)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 의회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결과는 내각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X)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④ (O) t+1기에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A당이 존재하므로, A당 이외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t기에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국회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1기에 비해 t기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보 기〉			
질문 내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오
(가)	예	예	예

-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③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 ④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vs 이익 집단 vs 시민 단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입니다. 나머지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중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인 B는 '시민 단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C는 '이익 집단'입니다.

- ① (X) 정당(A)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화 기능은 정당(A) 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B)와 이익 집단(C) 모두가 수행하는 공통점입니다. 참고로 정치 사회화 기능이란 개인이 정치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② (X) 정당(A), 시민 단체(B), 이익 집단(C) 모두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입니다. 또한 정당(A), 시민 단체(B), 이익 집단(C) 모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이며,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합니다. 참고로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이 정부에 대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X) 대의제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B)와 이익 집단(C) 모두 국민이 상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④ (O) ②번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A), 시민 단체(B), 이익 집단(C) 모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C 모두 '예'라고 답한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보일러를 독점 생산하는 K기업은 보일러 가격 10%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K기업의 직원 A~D가 예상한 보일러의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A	B	C	D
판매 수입 변화율(%)	10	-10	5	0

- ①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 ②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③ C는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 ④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 \frac{\text{수요량 변화율}(\%)}{\text{가격 변화율}(\%)}$$

- ① (O) A는 보일러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도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 판매량(수요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보일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일 것입니다.
- ② (X) B는 보일러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이 오히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이므로, 보일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일 것입니다.
- ③ (X) C는 보일러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다는 의미이므로, 보일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입니다.
- ④ (X) D는 보일러 가격이 10% 인상되더라도 판매 수입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보일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일 것입니다.

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콤한 김치에 흰쌀밥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 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 ②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③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 ④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은 한국인들에게 김치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먹는 것은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으로 이는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① (X) 문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 ② (O)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원활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X) 문화가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해지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축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집니다.
- ④ (X)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의 각 영역은 모두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7. <보기>의 (가), (나)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보 기>

(가)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갑(甲)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 직장을 다니던 을(乙)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① 전체 인구			
③ 만 15세 미만 인구	② 노동 가능 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④ 비경제 활동 인구	⑤ 경제 활동 인구	
		⑥ 취업자	⑦ 실업자

* 실업률 ⑦÷⑤×100 * 취업률 ⑥÷⑤×100
 * 고용률 ⑥÷②×100 * 경제 활동 참가율 ⑤÷②×100

- ① (가)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 ② (나)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었다.
- ④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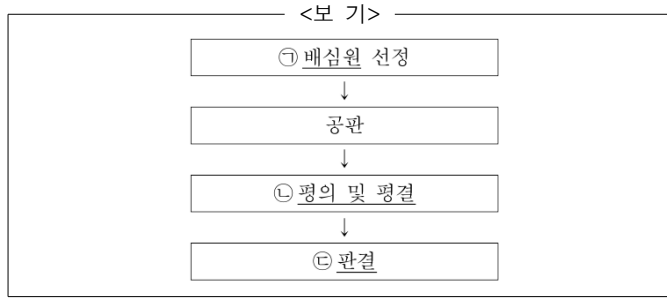
[출제영역] 실업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에서 갑(甲)은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경우이고, (나)에서 을(乙)은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 ① (O) (가)의 경우 취업자 수(⑥)는 감소, 실업자 수(⑦)는 증가할 것이며,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률(⑦÷⑤×100)은 상승하고, 고용률(⑥÷②×100)은 하락합니다.
- ② (X) (나)의 경우 취업자 수(⑥)와 경제 활동 인구(⑤)는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④)는 증가할 것이며,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률(⑦÷⑤×100)은 상승하고, 고용률(⑥÷②×100)은 하락합니다.
- ③ (O)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었습니다.
- ④ (O) (가)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⑤)에 변화가 없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⑤)가 감소하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전보다 하락합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②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 ③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국민 참여 재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는 국민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입니다.

- ① (O) 국민 참여 재판은 제1심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의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 ② (X)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어야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데 적합하지 않아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③ (X)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끼리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를 '평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평결'이라고 합니다.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X)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 中 -

- ①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 ②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 ④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 루소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루소'의 저서입니다.

- ① (X) 루소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은 '일반 의지'입니다. 참고로 '일반 의지'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개별) 의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 ② (X) 루소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주장,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장, 대의제를 비판하고 일반 의지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 등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됩니다.
- ③ (X)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평가한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입니다.
- ④ (O) 사회 계약설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입니다.

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 기>			
특징 \ 제도	A	B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아니오	예	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③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니오’ 라고 답한 A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라는 물음에 ‘예’ 라고 답한 B는 사회보험, ‘아니오’ 라고 답한 C는 공공부조입니다.

① (X) 사회 서비스(A)는 강제 가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B)의 특징입니다.

② (X) 사회보험(B)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능력’만큼 금액을 부담하고 ‘필요’에 의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③ (O) 공공부조(C)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C)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X) 사회보장 제도 중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A)입니다. 사회보험(B)과 공공부조(C)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사회서비스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비해 현저히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개념을 과도하게 나눠버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